

《천안》호침몰을 《북어뢰공격》으로 조작한 리명박역적패당의 진목적

김 병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을 반대하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매번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듯이 날조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넘겨씌워보려고 책동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김일성전집》 제55권 261페이지)

남조선피뢰함선 《천안》호가 침몰된지 5년이 지났다. 이 기간 리명박역적패당은 피뢰함선침몰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그를 계기로 일대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벌였으며 박근혜패당 역시 《천안》호사건에 대한 《상기》와 《응징》을 부르짖고있다.

이 글에서는 《천안》호사건이 발생한 당시의 시점에서 리명박역적패당이 함선침몰의 원인을 《북어뢰공격》에 의한것으로 조작한 진 목적을 밝히려고 한다.

《천안》호침몰을 《북어뢰공격》으로 조작한 리명박역적패당의 진 목적은 첫째로, 전면적인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합리화하자는데 있었다.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이전시기에는 상상할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로 발전하였다.

북남사이의 총리급접촉, 상급회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실현되고 금강산관광, 개성공업지구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며 남측언론사대표단이 북을 방문하고 체육, 예술행사들이 진행되었다. 민간급에서도 각이한 계층과 단체들이 북과 남을 호상방문하고 통일행사들을 진행하였으며 인도주의적협력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리명박역당의 《실용정부》가 출현한 이후 북남관계는 악화되고 전면적으로 파탄되었다.

2007년 11월 남조선에서 《대통령》선거가 있는 다음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리명박역당은 《대북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의 핵개발포기를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남북관계해결의 준칙》으로 삼을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핵문제를 구실로 하는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선포하였다.

이것은 북남사이에 대화가 아니라 대결을, 단합과 협력이 아니라 분열을 추구하려는 리명박보수세력의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였다. 리명박일당은 집권 첫 시기부터 화해와 협력, 통일로 나아가던 북남관계를 전면차단시키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온 민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있는 6.15북남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공동선언을 부정하고 그 리행을 거부하면서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반통일정책을 감히 대치시키였다.

역도가 들고나온 《비핵, 개방 3000》은 본질에 있어서 핵문제를 구실로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내부와해를 통하여 우리를 《개혁, 개방》으로 유도함으로써 끝수에 배긴 흡수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이다.

2008년 3월 역당은 피뢰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나 협력도 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들어댔고 10월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는 《남북관계는 적당히 시작해 끝이 나는것보다 제대로 시작하는것이 좋다.》, 《대화를 5년간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악의에 찬 망발까

지 늘어놓았다. 심지어 《북과 대화하다가 지난 10년을 다시 되풀이할수 있다.》, 《대북 무시, 외면전략으로 나가야 한다.》, 《대화의 문을 닫아매고 군사연습, 뼈라살포 등으로 북을 압박해나가야 한다.》는 《대북전략 비밀문건》까지 작성하고 실행하였다.

이에 따라 북남상급회담을 비롯한 고위급회담은 물론 민간급의 교류가 전면적으로 차단되기 시작하였으며 중요한 협력교류사업이 파탄되거나 중지될 위협에 처하였다.

금강산관광을 파탄시킨것이 그 대표적인실례로 된다. 리명박역적패당은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남조선관광객의 부주의로 인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자 기다렸다는듯이 그것을 구실로 일대 반공화국소동을 벌리던 끝에 10년간이나 진행되어오던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시키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북남협력사업에 대하여 《퍼주기》로 모독매도하면서 북남관계문제도, 동족사이의 협력도, 개성공업지구사업에도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였다.

총적으로 리명박역적패당은 《천안》호사건이전까지의 화해와 협력의 북남관계를 외세와 야합하여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 돌려세운 반통일정책의 고안자, 실현자로서 력사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

상전의 지령에 따라 화해와 협력, 통일로 지향하는 민족의 흐름에 역행하는 역적패당의 책동은 내외의 거세찬 항거에 부딪쳤다. 남조선의 민주로동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회》연설과 기자회견, 성명, 론평발표 등을 통하여 《실용정부》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비난하고 10년간 좋게 발전하여온 북남관계파탄의 파국적후과는 전적으로 리명박역도의 《실용정부》에 있다고 강하게 들고나왔다.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련대, 조국통일범민족련합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해외통일운동단체들도 리명박역적패당을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대결의 파국적위기에 몰아넣고 조선반도에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온 주범으로 락인하고 당장 북과의 대화에 응해나설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조성된 사태앞에서 쫄쫄매던 리명박역적패당에게 있어서 《천안》호사건은 저들의 책임을 모면하고 반공화국대결을 정당화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되었다. 《천안》호침몰을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으로 날조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공화국대결감정을 불리일으킬뿐아니라 나아가서는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에 있으며 《도발》을 일삼는 북과는 화해와 협력이 아니라 오직 대결밖에 없다는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천안》호침몰을 《북어뢰공격》으로 조작한 리명박역적패당의 진목적은 둘째로, 《북위협》론을 부각시켜 남조선-미국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데 있었다.

사실상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남조선-미국관계는 그 이전시기에 비하여 점차 어성버성해지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대결의 악순환을 반복하던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발전하고 지난 시기 미국이 없으면 살수 없다고 생각하는 숭미사대주의에 물젖어있던 적지 않은 남조선사람들속에서 미국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데 원인이 있었다.

6.15북남공동선언의 발표를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인 영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남조선사회전반에서는 《이북바로알기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특히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해주시여 반목과 대결의 시대를 끝장내고 협력의 시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흠모의 열풍이 온 남조선에 차고

넘치는 속에 북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진실이 널리 알려짐에 따라 남조선인민들의 의식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위협은 북의 《남침》이 아니라 남의 북침이며 그 주되는 요인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있다는것, 미국이야말로 오랜 세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주범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6.15북남공동선언발표후 걸으로는 환영과 지지를 표방하면서 남조선당국을 압박하여 북남관계의 진전을 걸음걸음 가로막아나서고 대규모의 군사연습으로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면서 북남상급회담까지 결렬시킨 미국의 태도는 남조선민심을 격분케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남조선에서는 이전시기에 볼수 없었던 대규모의 반미투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2002년 6월 군사연습에 돌아치던 미군 장갑차가 경기도 광주군 양적면에서 나어진 두 녀중학생을 무참하게 깔아죽인 야수적만행을 계기로 일어난 대규모시위와 초불행진, 2006년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체결반대투쟁, 2008년 5월 미친소병에 걸린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투쟁 등이 그 대표적실례였다.

한편 6.15북남공동선언의 당사자인 《국민정부》시기에 이어 2003년에 출현한 《참여정부》시기에 들어와서도 미국-남조선관계에서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불협화음들이 울려나왔다.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남조선민심이 미국을 배격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자 6.15북남공동선언의 당사자인 《국민정부》시기는 물론 그 리행을 공약으로 들고나온 《참여정부》도 이를 외면할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반대와 친미수구보수세력의 악랄한 방해책동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시기에 10.4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계속되었다.

《참여정부》는 《자주국방》론을 들고나오면서 미군이 행사하고있던 전시작전지휘통제권반환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하여 남조선-미국관계는 더욱더 어성버성해졌다.

미국은 전시작전지휘통제권반환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질겁하여 2007년 2월에 형식상으로나마 2012년까지 전시작전지휘권을 반환하는 기본합의문에 도장을 찍지 않을수 없었다.

전시작전지휘통제권에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전쟁수행능력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전시련합작전계획의 수립 및 발동권, 련합군사연습준비 및 시행권, 조기경보제공을 위한 련합정보관리 등 6대권한이 포함되어있다.

미국이 이 권한을 남조선에 넘긴다는것은 남조선피괴들을 손아귀에 거머쥐고 반공화국침략전쟁을 기어이 감행하려는 전략적목적과 군사적지배를 통한 식민지통치에서 공백이 생긴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식《가치관》으로 잔뼈를 굳힌 특등친미사대매국노인 리명박역도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게 되었던것이다. 역도는 이전 《정권》시기에 《남조선-미국동맹이 10년 후퇴하였다.》라고 떠들면서 괴뢰《대통령》자리를 따내기 바쁘게 남조선미국련합사령부에 찾아가 《동맹》강화의 중요성을 떠벌이다못해 남조선인민들이 《미국병사들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있다.》느니 뭐니 하는 얼빠진 녀두리까지 꺼리낌없이 내뱉었다.

특히 미국에 붙어서 잔명을 유지해야 하는 주구의 처지에서 역도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의 불길을 그대로 방임할수 없었으며 전시작전지휘통제권반환을 어떤 구실을 마련해서라도 막으려고 책동하였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집권하자마자 이전 《정권》이 미국으로부터 2012년까지 전시작전지휘통제권을 넘겨받기로 한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그것을 뒤집어엮기 위해 온갖 못된짓을 다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천안》호침몰사건이 발생하였던것이다.

리명박역도는 《천안》호침몰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북의 《도발》과 《위협》, 그에 따르는 조선반도의 《불안정》을 크게 부각시켜 남조선인민들에게 미국을 떠나서 남조선의 안정을 이룩할수 없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거세찬 반미투쟁의 불길을 끄는 한편 이를 구실로 전시작전지휘통제권반환을 기각 또는 연기시키며 미제침략군의 발목을 붙잡고 남조선-미국동맹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려고 타산하였던것이다.

한편 미제는 리명박역적패당의 청탁을 받아들여 전시작전지휘통제권반환기한을 연기하여 군사적지배권을 계속 유지하고 이를 미끼로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더 깊숙이 그어안으려는 목적에서 《천안》호침몰사건의 책임을 북에 넘겨씌우기 위한 역도의 책동에 적극 가담하고 지지비호하였던것이다.

《천안》호침몰을 《북어뢰공격》으로 조작한 리명박역적패당의 진목적은 셋째로, 남조선의 민심을 오도하여 혼란된 정국을 수습하고 지지기반을 확보하자는데 있었다.

미국의 음흉한 모략과 후원으로 출현한 리명박역도의 《실용정부》는 초시기부터 그 자체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인민들의 배격을 받았다.

그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경제침체로 인한 극심한 생활난에 있었다.

《실용정부》출현이후의 현실은 《경제대통령》을 운운하면서 역도가 내들었던 화려한 선거공약들이 단지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여 《대통령》감투를 쓰기 위한 간판이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역도가 집권한 첫해인 2008년의 경제성장률은 급격히 떨어져 1998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고 2009년에는 더 낮아져 -2.4%를 기록하게 되었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08년에 2007년에 비하여 11.4% 떨어져 남조선인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남조선경제의 명줄이라고 하는 수출이 미국금융위기의 파국적후과와 경제의 대외적 예측의 강화, 반인민적경제정책으로 2008년에는 남조선에서 수출통제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7년 이래 최악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수출의 감소로 무역적자가 급격히 늘어나 130억US\$를 넘어서게 되었다.

2010년 3월현재 4 000억US\$에 달하는 채무, 7 000억US\$의 가계부채, 500만명의 실업자, 1 000만명에 이르는 빈궁자, 각종 사회악으로 하여 남조선사회전체가 일대 수라장으로 되었다.

그 요인의 다른 하나는 리명박역적패당이 정치적반대와 그리고 각계층 진보세력과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광란적으로 벌린데 있었다.

리명박은 집권첫날부터 《정권교체기에 사회전반의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가 있다.》, 《한총련과 같은 친북단체들을 숙청하고 보수진영에 힘을 북돋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떠들면서 전면적인 파쑈폭압전쟁을 선포해나섰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때의 여, 야당후보들을 비롯하여 많은 정객들이 정치적보복대상이 되어 박해를 당하고 파쑈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끌려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검찰에 끌고가 조사놀음을 벌리게 함으로써 종당에는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실용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과 교수들에 대한 정치사찰이 감행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과 청년학생들의 등록금인상반대투쟁이 당국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는 등 군사독재정권시기의 공포정치, 파쇼통치가 그대로 재현되었다. 리명박《정권》시기에 와서 이전 군사파쇼정권때 악명을 떨친 방식모와 방패, 전기충격기로 완전무장한 폭압경찰과 물대포, 《백골단》이라는것도 다시 등장하였다.

남조선의 진보세력과 각계층 인민들은 생활을 파탄에 빠뜨리고 남조선사회를 불의가정의 칼부림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민주와 인권의 폐허지대로 전락시킨 리명박패당을 단죄규탄하는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매일같이 열고 성명과 긴급호소문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리명박역도는 남조선사회에 조성된 정치경제적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이전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조작하여 인민들의 투쟁의 눈길을 판데로 돌리는데 있다고 타산하였다.

만약 피뢰함선침몰사건이 자체실수에 의한것이거나 원인불명의 사고로 판명되는 경우 격노한 민심이 리명박역도와 그 패당들을 통채로 뒤집어엎으리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였다. 여론들은 《천안》호사고가 자칫하면 남조선전체를 두동강, 세동강낼수 있다고 의미심장하게 평하였다.

특히 함선침몰사고가 남조선정치세력편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지방자치제선거직전에 일어난것으로 하여 사건의 책임이 피뢰정권에 있다는것이 판명되는 경우 《선거》를 통하여 불안정한 집권체제의 안정을 꾀하는 역도에게 있어서 치명적이었다.

지방자치제선거는 본질에 있어서 민주세력과 보수세력과의 치렬한 대결이었다. 이로부터 리명박패당은 급급히 밀실에서 《천안》호사건의 《원인발표—대통령담화—국방부성명》이라는 각본을 짜놓고 여느날도 아닌 《지방자치제선거》를 위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첫날에 《천안》호침몰을 《북어뢰공격》으로 매도하는 극히 도발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반공화국전면대결을 선포하는것으로써 저들에게 향한 인민들의 분노와 규탄을 판데로 돌리고 음흉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던것이다.

모든 사실은 《천안》호사건이 음흉하고 불순한 목적을 노린 리명박역적패당의 모략의 산물이라는것을 여지없이 증명해주고있다. 그것은 오늘까지도 《북어뢰공격설》이 국제사회는 물론 남조선내에서도 규탄배격되고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국방위원회검열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는데서 명백하게 알수 있다.

력사의 진실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현 남조선피뢰당국은 《천안》호침몰과 관련하여 리명박역도의 전철을 밟아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세계와 민족앞에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여야 할것이다.